

신자유주의의 새 격전장

2006 프랑스

① 프랑스의 봄은 거리에서 시작됐다.

② 신자유주의에 대한 좌파의 시각

- ③ 대안이 되지 못하는 좌파
- ④ 한국은 프랑스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파리=류재훈 기자

프랑스 모델의 위기일까? 최초고용계약제(CPE)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실업자 보호 정책과 35시간 노동제의 프랑스 고용모델에 대한 논쟁이 거세다.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급증을 두고 고용모델의 실패로 볼 수 있는냐는 논란이다. 우파 정부 쪽에서는 고용보호 수준은 프랑스보다 낮지만 취업지원과 빈곤층 보호 등 고용안정 쪽에 무게를 둔 덴마크 모델을 본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용과 노동문제에 대해 프랑스 내 대표적인 전문가인 미셸 위송 경제사회연구소(IRES) 연구원과 베르나르 가지에 파리 제1대학 경제학과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다. 가지에 교수는 모델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위송 연구원은 덴마크 모델의 도입은 프랑스 사회의 맥락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최초고용계약제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벌어진 지난 4일 파리에서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AFP 연합

“고용유연화로는 일자리 못늘려”

좌파시각

-최초고용계약제(CPE)의 경제적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고용시장 유연성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기업이 (경기에) 빨리 적응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자체가 일자리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고용되면, 쉽게 해고하게 되는 것이다.

-최초고용계약제가 결국 고용불안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만약에 최초고용계약제를 도입하게 되다면, 청년들의 안정적 고용을 방해하게 된다. 청년들의 안정적, 지속적 고용이 힘들게 되고, 결국 숙련노동자가 되거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높은 실업률, 특히 20%가 넘는 청년실업률과 관련해 프랑스 고용모델의 위기가 얘기되고 있다.

=프랑스의 청년실업에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 지난 10년을 보면 고용창출 측면에서 프랑스는 영국이나 덴마크보다 더 높고, 유럽 평균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모델이 실패한 건 아니다. 네덜란드에선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실업률의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다. 영국 같은 경우, 실업자가 되면 보상도 없으면서 단기간 통계에서 제외된다. 통계만 가지고 비교하기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우파정부 쪽이 덴마크 모델에서 도입하려는 하는 점은 뭔가?

=다른 맥락이나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반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지출을 감축해야 하는 근본적 문제도 안고 있다. 덴마크 모델을 도입할 경우, 유연성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지출을 줄여야 하는 자유주의 정부에겐 모순이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많이 주게 되면 청년들이 일을 안 하게 된다. '실업함정'에 빠져 일을 안 하는 '사치스런 실업자'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 모

델에서 정책적 합의를 가져온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자유주의적 개혁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배우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프랑스 모델과 덴마크 모델은 경제규모나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차이가 많다.

=현재 두 모델의 차이가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두 모델은 10년 전에 실업률이 비슷했다. 그 이전에도 덴마크에선 그 모델이 존재하고 있었고, 최초고용계약과 비슷한 제도도 시행됐다. 그런 점에서 덴마크 모델이 실업률 감소의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프랑스의 실업은 모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거시경제 상황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화 과정에



미셸 위송

- 경제사회연구소(IRES) 연구원
- 국립통계청(INSEE) 행정담당관
-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 학술위원

서 덴마크 같은 작은 나라는 빨리 적응했고, 프랑스나 독일은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

-한국에선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 좌파와 신자유주의는 함께 갈 수 있는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권들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997년 유럽연합은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유럽의 사회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잘 작동되지 않았다. 애초에는 경

‘쉽게 고용 쉽게 해고’ 숙련기회 막아 프랑스모델 아닌 경제상황이 문제 ‘좌파’와 ‘신자유주의’ 함께 작동 못해

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그 결과로 사회보장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결과, 신자유주의정책을 더 밀어붙여야 하는 (모순된) 논리로 바뀌었다. 그 정책을 '사회자유주의'라고 부른다. 그 시기 15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11개국의 시민주의 정권이 지금은 줄어들었다. 사회자유주의 정책은 실패했다. 독일의 경우, 시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극단적으로 강화한 결과를 초래해, 선거에서도 졌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자유주의를 생각나게 한다.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은 유럽이 잘 보여주고 있다.